

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 
〔2023. 3. 7.(화)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화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3. 3. 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3월 7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34
- 나. 발 의 자: 홍재희 의원 외 11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2월 24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
## 2. 개정이유

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 활성화 지원방안을 보완하며, 주민들을 위해 자치회관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회관 시설 등 이용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행위를 신설함(안 제38조제4항제1호 ~ 제6호)
- 나. 보험가입의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(안 제38조제5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 
제27조, 제28조, 제29조
- 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2. 27. ~ 2023. 3. 6.) 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보완하며, 주민들을 위해 자치회관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임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○ 안 제38조

- 제1항)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됨
- 제4항)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, 특정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(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 제외) 및 영리목적의 행위 등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이용제한 행위를 구체화함
- 제5항) 자치회관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는 시설보험 가입의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의 자치회관 이용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(反)하여 변상, 사용승인의 취소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보다 탄력적인 자치회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
- 또한, 「국가배상법」 제5조<sup>1)</sup>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인 동장이 시설보험 가입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나, 각 부서(동)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등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 보험을 일괄 가입(회원명: 강서구청)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으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
- 다만, 조례 제38조 제4항에 신설된 제2호는 조례 제32조의 자치회관 기능이 주민자치기능,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·교육기능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, 해당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봄.

1) 「국가배상법」 제5조(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)

① 도로·하천,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(營造物)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(瑕疵)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조례안	검토의견	
	개정안	검토사항
제38조(이용 등) ① 주민은 <u>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</u>	제38조(이용 등) ① 모든 주민은 <u>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</u>	
④ 동장은 <u>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 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	④ ----- <u>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<u>거처 변상, 사용승인의 취소,</u> ----- -----.	
<신 설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 (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</li> <li>3.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</li> <li>4.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5.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</li> <li>6. 그 밖에 동장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	<p>조례 제32조에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세칙에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치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,</p> <p>의정보고회를 예외로 두는 것은 자치회관 본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</p>

조례안	검토의견	
	개정안	검토사항
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	⑤ 구청장----- ----- ----- -----.	자치회관 운영 주체가 동장이므로, 보험가입 주체를 동장으로 명시한 것은 해석상 문제가 없어보이며 각 부서(동)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은 영조물배상 장기공제 보험 등록 신청을 받아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음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